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36호 | 2010년 3월 17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상철 | www.nars.go.kr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요과제

1. 들어가며

G20 정상회의는 선진 7개국 G7과 러시아, 그리고 ‘신흥시장국’ (emerging markets) 등 주요경제국(systematically important economies)으로 구성된 정부간 경제협력체로서, 참가국¹⁾의 인구 규모는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포함되어 있고, 세계 GDP의 85%를 생산하는 수준이다. 향후 G20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빈곤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세계 문제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될 전망이다.

<표 1> G20 정상회의 개최연보

	개최장소	개최기간
제1차	워싱턴	'08.11.14-15
제2차	런던	'09.3.31-4.3
제3차	피츠버그	'09.9.20-26
제4차	토론토	'10.6.26-27
제5차	서울	'10.11.11-12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뿌리내린 G20 정상회의가 올해 11월 11일-12일 양일간 비서

1)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미국, 유럽연합

구권(非西歐圈) 국가로는 최초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이 세계경제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진입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경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위치로 부상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더 나아가 세계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는 일이 온전히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G20의 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한다.

2. G8에 대한 G20의 자율성 제고

G20의 위상에 대한 관점은 G8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G20과 G8을 경쟁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작금의 세계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세계경제협의체는 G8이 아니라 G20이기 때문에 중국적으로는 G20이 G8을 대체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견해는 2009년 3월 런던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G8의 시대는 끝났다”(era of the G8 is over)는 영국 통상장관인 만델슨(Peter Mandelson)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둘째는 G20과 G8을 공존관계로 인식하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양 정상회의는 차별화된 회원의제개최시기에 의거한 회의로 분업화된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009년에 이탈리아 아퀴라(L'Aquila)에서 개최된 G8정상회의에서는 국제경제문제보다는 기후변화, 발전, 안보, 비핵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중심의제로 다룬 반면에, 동년의 G20 정상회의는 국제경제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셋째는 G8을 G20의 하위그룹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양 정상회의가 다루는 의제는 겹칠 수 있으나, G8은 G20이 결정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거나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G8 정상회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G8의 역할은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이 엇갈린 관점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사항은 G20 정상회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루 대표함으로써 균형 있는 세계발전을 지향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지도자 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G8에 대한 G20의 자율성이 한 층 더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20의 순번제 의

장국 제도는 G8에 대한 G20의 자율성을 드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G8회원국이 의장을 맡기 시작하면서 G20은 점차 G8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G8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G20의 자율성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이를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G20 정상회의의 대표성 확보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의 대표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G20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아르헨티나 보다 경제규모가 더 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왜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는데 아르헨티나는 가능한가?” 라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또한 유세프 부트로스 갈리(Youssef Boutros-Ghali) 이집트 재무장관은 “G20의 참여국은 해당지역 국가들이 당면한 현안들을 잘 이해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즉 인근국가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동일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이어야 한다” 는 발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G20에 참여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²⁾ 이처럼 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의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해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스페인과 네덜란드)이 추가됨에 따라 더욱 증폭되었다. 즉 왜 어떤 국가는 되고, 어떤 국가는 안되는냐의 문제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G20의 유럽회원국들은 유럽의 비회원국들로부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³⁾

2) Reuters News 2008년 11월 26일자

3) Hadi Soesastro, *East Asia, the G20 and global economic governance*, East Asia Forum 2009년 3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G20 정상회의 이전에 국가들 간의 다층적인 의사소통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층적이란 지역별뿐만 아니라 현안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간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회의를 말한다. 이 같은 다층적 의사소통구조가 G20 정상회의와 연결되지 못할 경우 G20 정상회의에 대한 대표성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4. G20 선언과 실천의 괴리극복

G20 정상회의 개최에는 늘 화려한 수사(修辭)가 앞서고 현실 인식은 뒤이어 나타난다. 실제로 2009년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서도 고든 브라운

(Gordon Brown) 영국 총리는 이 정상회의를 가리켜 '신 브레튼 우즈(New Bretton Woods)' 혹은 '세계적 뉴딜(global new deal)'이라고 불렀지만 뒤에 그 의미가 'a part of process'로 축소된 바 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은 공동선언문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발표문안과 후속실천 사이에는 늘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지난 해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예외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규범에 충실할 것을 결의했으면서도 실제로는 G20 회

원국들 가운데 17개 회원국들이 관세인상·비관세장벽 설치·세금감면 혹은 보조금 형태의 예산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47개의 무역제한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하여 2009년 2월 미국 의회는 'Buy America' 조항을 '9천억 달러 경제회생 계획' 속에 포함하여 통과시켰다. 동 조항은 위 경제회생 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공사에는 미국산 철강제품이나 자재만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국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 조치들은 분명 WTO의 정신과 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역제한조치들을 역전시키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 1) G8에 대한 G20의 자율성 제고,
- 2) G20의 대표성 확보방안,
- 3) G20 선언과 실천의 괴리극복,
- 4) 지역 전략적 접근의 강화,
- 5) G20 정상회의 행사안전 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 추진해야

즉 G20은 현재 UN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들간의 협의기구에 불과하여 합의를 도출하거나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G20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지역 전략적 접근의 강화

국제관계에서 전략적인 접근이란 우리의 세(勢)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이해를 같이하는 세력을 결집하여 이를 토대로 이익을 관철시키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성공시킨

사례로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지난 런던 정상회의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중국, 남아공 등과 공조하며 아르헨티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특히 ‘노동과 개발도상국의 대변인’ “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오랜 친노동의 전통에 기반을 두어 국제노동기구의 G20 참여를 주장, 관철시켰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IMF가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단지 개발도상국만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관이었다고 비판했고,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강대국의 과도한 IMF 통제를 근거로 IMF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통해 브라질, 중국, 한국, 인도 및 터키와 같이 국가경제의 비중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쿼터를 받아야 했던 국가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이렇듯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IMF 관련 정치 아젠다를 G20의 아젠다와 성공적으로 연결시켰다.

우리도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G20 회원국들과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이들과 함께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과 이 지역의 관심사항들을 표방하고, 스스로 도출한 창의적 생각들을 제안 하는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지역적인 혹은 준지역적인 접근 (regional or sub-regional arrangements)은 해당 지역 국가들의 목소리를 드높여주고, 특히 소국들의 연대의식을 강화시켜주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G20 정상회의의 행사안전 확보

대규모 중요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불법 과격시위나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공들인 국제행사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집단과 개인이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7월에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주요 8개국(G8)이 참여하는 G8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15만 명이 넘는 반세계화 시위대가 격렬한 폭력시위로 치달았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1명이 죽었고 220여 명이나 부상하는 등 유혈사태를 빚었다. 반세계화 집단은 작년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도 저지하기 위해 5000명이나 모였고, 격렬한 시위도중 결국 1명이 사망했고 111명이 연행됐다. 작년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종이총알 진압총과 음향대포를 경찰에 지급해 폭력시위에 대비했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관계당국은 다가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팀장 김 영 일(정치학박사)

입법조사관 유 응 조(정치학박사)

(788-4551, wyoukr@nars.go.kr)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수시로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 소식지입니다.

※ 본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